

중국 정부의 무력 위협에도 홍콩 시위 계속된다

관련 기사 3면

노동자 행동이 관건이다



사진: 이종진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폐기하라

8면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반대해야
한다

8면

틀게이트 투쟁

50일 넘긴 여성노동자
노숙농성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

4면

대우조선 매각-현대중공업 인수
반일 민족주의 내세워
구조조정 압박 말라

6면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4~5면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3차 파업

5면

서평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7면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 취소 결정

진보 자처하더니 성소수자 행사 막은 해운대구청(민주당)

올해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부산 해운대구청의 방해로 취소됐다. 성소수자들이 단 하루 자신을 맘껏 표현하고 조금의 해방감을 느낄 기회마저 앗아가 버린 것이다.

해운대구청은 지지난해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산퀴어문화축제의 장소 사용(도로 점용)을 불허했다. 그리고 축제를 강행할 경우 기획단(주최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는 물론,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다며 협박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경찰은 기획단원을 사찰하기까지 했다.

해운대구청은 지난 2년 동안 불허에 굴하지 않고 부산퀴어문화축제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획단장을 고발하고 과태료를 물렸다. 지난해 박근혜 퇴진 운동의 여파로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해운대구청장이 당선됐지만 변한

건 없었다. 해운대구청장 홍순현이 말한 '변화의 바람'이 성소수자들한테는 불지 않았다.

홍순현은 지난해 2회 부산퀴어문화축제도 같은 이유로 장소를 불허했다. 방해가 이어지자, 결국 주최 측은 “참가자와 기획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올해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해운대구청은 장소 불허 이유로 ‘시민 통행 안전’을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간 부산퀴어문화축제는 매해 2000여 명이 모였고, 안전사고 없이 잘 치러졌다. 지난해 8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2만 5000명이 몰린 ‘부산 세계 마술챔피언십’ 행사가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후원까지 받으며 열린 바 있다.

원하는 장소에 모여 축제할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 성소수자들이 ‘우리

는 시민이 아니란 말이나!’ 하며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

부산에서 ‘진보’를 자처하던 민주당 인사들은 성소수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성소수자들이 집회를 하고 우익들과 충돌하는 등 ‘소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특히나 해운대처럼 부유층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말이다.

부산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손꼽아 기다렸던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주최 측이 “오늘의 숨고르기가 내일의 합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는 여러 노동·사회운동 단체들과 개인들의 연대가 폭넓게 조직돼 다음엔 더 성대하게 행사가 열리길 바란다.

성지현



부산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퀴어문화축제 탄압한 해운대구청 규탄한다 지난 2년간 매해 2000명이 넘게 모인 부산퀴어문화축제

한 진보단체 회원의 윤소하 의원 협박 혐의에 대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협박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유모 씨의 재판이 8월 22일 시작된다.

사건은 7월 3일 벌어졌다. 그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의원실에 “태극기 자결단” 명의로 죽은 새와 문구용 커터 칼, 그리고 “민주당 2중대 ...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 ... 너는 우리 사정권 안에 있다”는 협박 메시지를 담은 소포가 왔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다 때, 우파 열성분자가 진보 정당 정치인을 협박한 사건으로 보였다. 정의당 반우파 기조를 분명하게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협박 소포를 보내는 흉측한 행태에 분노가인 것은 당연했다. 윤소하 의원이 수사를 즉각 의뢰한 것도 우파의 소행이라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검찰·경찰은 이 협박이 진보 단체의 간부가 벌인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진연은 줄곧 반미·반우파·통일 운동을 실천해 온 단체다. 최근에는 반자유한국당, 반일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다.

7월 말에 구속된 이후 유모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연은 이번 구속·기소가 자한당 규탄 투쟁에 대한 공안 세력의 보복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검찰이 CCTV를 근거

로 민권연대 회원을 구속했으나 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온 사례도 소개했다.

공안 수사기관이 얼마든지 증거 조작을 자행할 정도로 아비하고 파렴치한 집단인 것은 불문가지다. 당사자들도 혐의를 부인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알리바이가 아직 제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대진연과 유모 씨는 수사 단계에서는 묵비를 하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적극 반박하며 부인할 생각인 듯하다. 수사기관들의 우파적 속성을 생각하면, 형사재판 사건에서는 그것이 현명한 대처일 것이다. 더구나 유모 씨가 운동 단체의 간부임을 알고 구속한 상황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수사 단계에서 적극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해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 진상을 단정해 비난부터 한 것은 경솔하다.

설사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실제로 해치거나 그럴 목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까지 할 사안인지 의심스럽다. 설령 사실로 드러나도 그 동기는 조잡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반(反)우파 여론을 격분시켜 투쟁을 고양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따라서 우파가 과장과 호들갑으로 국면 전환의 작은 소재로 쓰려는 것에 진보·좌파 진영이 동조할 이유는 없다.

김문성

문재인 정부, 법원 판결보다 못한 기아차 불법파견 시정명령 예고

노동자 우롱 말라

김우용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정규직 조합원

지난 7월 초 기아자동차 사장 박한우가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만 따져도 10년이 넘었는데,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에 직접생산 공정의 불법파견에 한해서만 문제 삼았다.

이에 기초해 노동부 경기지청이 곧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한다. 그 대상은 기아차 화성공장의 860명이고, 그중 이미 여러 손해를 감수하고 특별(신규)채용된 이들과 60세 이상자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170여 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대상자 수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년 넘게 외면하다 이제야 내놓은 계획이 그동안의 법원 판결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노동부에 시정명령을 요구해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기아차 화성공장으로만 국한한 것도 문제다.

직접생산 공정만을 대상으로 하니, 당장에 많은 노동자들이 제외된다. 예컨대, 특별채용 과정에서 일하던 공정에서 쫓겨나 공장 밖 물류회사로 밀려난 수백 명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제외된다.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식당·청소 노동자들도 그런 경우



기아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 7월 24일 공동파업을 하고 모인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현대그린푸드 식당 노동자들

다.

이제라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마땅한데, 노동자들의 울분과 피눈물은 아랑곳 않고 정부가 오히려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오히려 좁히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 판결이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간접부서, 2차 하청까지 포함됐다. 물론, 법원 판결도 식당·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배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노동부는 누더기 불법파견 시정명

령으로 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말고,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김수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일 넘게 단식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들은 8월 20일 부분 파업을 집회를 연다. 생산 현장에서의 파업·시위를 확대하고 연대를 더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정규직 활동가들이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정부의 무력 위협에도 170만 명이 모이다

김영익

8월 18일 홍콩에 다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다. 집회를 공식 주최한 민간인권전선은 이날 홍콩 시민 17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한 현지 소식통은 실제 참가자 규모가 주최 측 발표보다 더 컸을 수 있다고 했다. 시위 당일 대중교통이 엉망이 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자발적으로 행진했다는 것이다. 앞서 홍콩 정부는 8월 18일 행진을 불허했지만 이 대규모 인파를 가로막지 못했다.

이날 170만 시위는 홍콩 경찰의 폭력과 중국 당국의 위협에도 홍콩 시민들이 송환법 반대 운동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고 운동이 지속될 것임을 보여줬다.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은 송환법안 완전 철회, 행정장관 캐리 람 사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지속해 왔다.

8월 5일에는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여 홍콩을 마비시켰다. 특히, 주요 지하철과 철도 노선이 멈췄고, 국제 항공 운항이 대거 취소됐다. 그리고 시위대가 지난주 화요일(8월 13일)까지 5일 동안 홍콩 국제공항에서 연좌 시위를 벌였다.

홍콩 당국은 시위대의 주요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며 경찰 폭력을 강화해 송환법 반대 운동을 탄압해 왔다. 갈수록 폭력의 강도가 세졌다. 그러다가 8월 11일 시위에 참가한 한 젊은 여성이 경찰이 쏜 빈백건(알갱이가 든 주머니탄이 발사되는 총)에 맞아 한쪽 눈이 실명할 위기에 처했다. 분노한 시위대가 12~13일에 공항 점거를 확대하면서 국제공항이 마비됐다.

빈백건

홍콩 당국이 시위대에 강경하게 대처하는 배후에는 중국 정부가 있다. 중국 정부와 그 관영 언론들은 홍콩의 시위와 점거를 “테러리즘”이라고 맹비난한다. 그리고 홍콩과 인접한 선전시에 무장경찰 수천 명이 대기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며, 중국이 시위 진압에 직접 나설 수 있다고 위협해 왔다.

중국 권력자들은 홍콩 시위를 단지 홍콩만의 일로 보지 않는다. 홍콩에서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자칫 중국 내 여러 사회집단이 홍콩 시위를 본받아 저항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국은 온갖 사회 문제와 모순에 봉착해 있다. 그래서 중국



8월 18일 거리로 나온 170만 시위대. 31일에도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고돼 있다

지배자들은 홍콩 시위가 소수민족, 농민 등 천대받는 집단들의 불만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중국 노동계급의 저항 잠재력을 가장 염려한다. 홍콩 인근의 광둥성 일대는 지난 20여 년간 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해 왔고, 중국 각지에서 온 새 세대 노동계급이 거대하게 형성돼 있다. 이곳에서 지난 수년간 노동 쟁의 횡수와 전투성이 계속 성장해 왔다. 노동자들이 국가로부터 독립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 한 민영기업 자스커지의 공장도 광둥성 선전시에 있다. 홍콩은 바로 이런 산업 지역과 점점 긴밀하게 연결돼 왔다.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홍콩 시위를 서방 앞잡이가 조종하는 색깔 혁명으로 비방하는 한 가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홍콩 시위와 중국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저항이 확산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홍콩 시위가 중국 노동자들이 상하이나 베이징에서 모방할 만한 시도로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서방 권력자들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중국 내에서는 중국 정부의 민족주의적 선전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된다.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서방 지배자들은 홍콩 시위를 이용해 중국을 비난한다. 영국 정부는 홍콩 상황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제국주의 경쟁 속에서, 서방의 간섭은 홍콩 대중 운동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시키려 애쓰는 시도다.

그러나 서방 지배자들의 홍콩 시위 지지는 위선일 뿐이다. 7월에《포린 폴리시》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 행태가 영국 식민지 시절의 유산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식민 당국이 몰래 준 폭동 진압 전술이 오늘날 홍콩에서도 계속 활용되는 것이다. 영국 등이 중국을 비난할 처지가 못 된다.

유산

물론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이 점증하면서, 그 압력이 홍콩 시위

같은 운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시위 일각에서는 서방의 지지를 호소하는 주장이 나오곤 한다.

그러나 시위대 일부가 서구식 민주주의에 환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서방의 앞잡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비방이다.

지금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은 홍콩 인구 4분의 1이 거리로 나온 대중 운동이다. 대중의 강력한 자발성은 이 운동이 서구의 조종을 받는 운동이 아님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다. 그리고 시위 참가자들 중에는 이 운동이 단순한 반중 시위가 아니며 중국 대중을 향해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운동의 사회적 구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 시위 참가자의 다수가 노동자들이다. 홍콩 노동자 대다수가 송환법 반대 운동을 지지하고 참여한다.

그러나 홍콩 자본가들은 운동을 적대하고 중국과 홍콩 당국을 지지한다. 시위가 10주 넘게 지속되자, 홍콩 경제를 지배하는 주요 재벌들(대표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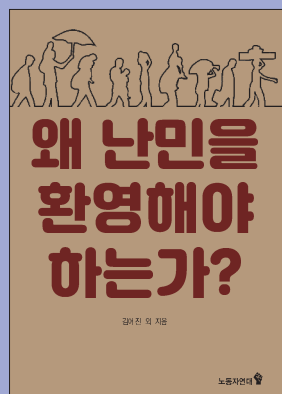
로 홍콩 최고 부자인 리카싱)이 일제히 시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정부와 경찰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나섰다.

홍콩은 오늘날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이 많이 진척돼 왔고, 중국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 줬다. 그만큼 홍콩 노동자와 청년들의 처지는 악화돼 왔다. 홍콩 자본가들이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반면에, 많은 홍콩 노동자와 청년들이 송환법안 철회 이상의 진정한 사회 변화를 염원하는 까닭이다.

두 달 넘게 시위와 점거가 지속되면서 운동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 사이에서 송환법 반대 운동을 지지하는 파업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8월 17일에는 교사들의 행진에 2만 명이 참가했다. 이런 행동이 계속 확대·심화돼야 한다.

홍콩과 중국 바깥의 좌파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고, 서방 지배자들의 위선을 들춰내며 진정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대의를 옹호해야 한다.

새로 나왔습니다



왜 난민을 환영해야 하는가?

김어진 외 지음 노동자연대 | 4,000원

이 소책자를 읽으면서 당신은 난민이 겪는 차별과 천대에 왜 반대해야 하는지를 또렷하고 가슴벅차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읽고 주변에 권유할 만한, 작지만 큰 울림이 있을 소책자.

혁명적 조직의 목적

최일봉 저작

노동자연대

혁명적 조직의 목적

최일봉 저작 | 노동자연대 | 2,000원

대다수 사람들은 혁명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수 사람들은 혁명이 가능하고 어쩌면 필요하지만, 혁명적 정치조직은 불필요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소책자는 혁명적 조직의 존재 이유를 살펴본다.

톨게이트 투쟁

50일 넘긴 여성 노동자 노숙농성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정취를 위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의 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서울톨게이트 고공농성이 50일을 넘겼다.

노동자들은 최고 온도가 46도까지 치솟는 서울 톨게이트 지붕 위와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끓는 청와대 앞에서 고통을 이겨 내며 싸우고 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해고된 노동자 1500명은 기세 있게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주류 언론들에서도 우호적으로 다룰 정도로 투쟁 지지 여론도 광범하다. 수납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룬 KBS 프로그램 '거리의 만찬'은 노동자들의 애환과 투쟁을 생생히 다뤘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갈등 국면을 이용해 애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우리는 그 국가에 의해 해고됐다”고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와 도로공사는 여전히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다. 8월 16일 도로공사는 공식 페이스북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이라는 제목의 자회사 정당화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카드뉴스에서 도로공사는 수납 업무가 “국민 생명·안전 외의 업무”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반복적 업무”이므로 직접고용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정규직 전환 기준을 험소하고 자의적으로 규정한 정부 가이



노동자들을 폭염 속 거리로 내몰아놓고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는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다

드라인의 문제점을 반복하는 것뿐이다. 발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씨도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됐다.

또한 도로공사는 이미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과의 “노노갈등” 때문에 1500명을 직접고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가소로운 책임전가다. 협박과 회

유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자회사사를 강요해 이 사발을 만든 장본인은 도로공사다.

책임 전가

한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다. 벌써 남원순창 지역 공천 얘기가 돌고 있다. 중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대량해고라는 칼을 휘두르고 자기는 출세하겠다는 나서는 모습이 역력다.

8월 12일에 노동자들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이강래 공천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서울지역 원내 민주당 의원 사무실 35곳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용산참사를 자행한 김석기 전 서울 지방경찰청장을 경주에 공천한 자유한국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정치 만행이고 패악질”이라는 민주일반연맹의 이강래 비판은 완전히 옳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들은 8월 19일에 이강래를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처럼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이강래를 강하게 규탄하며 투쟁하고 있는데도 문재인은 묵묵부답이다. 이강래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수뇌부 사이의 교감 없이 공천 추진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섭이 시작되고 도로공사는 1500명 중 대법원 판결 계류자 300여 명에 대해 한시적 기간제 채용 방안을 내놔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로공사 기간제로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다시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다. 이는 1, 2심도 끝나지 않은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자회사만을 강요하는 방안이다. 자회사로 가는 노동자들은 소송도 포기해야만 한다.

도로공사가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임จ้าง’ 없는 것이 ‘임장’이라며 방관하고 있다.

8월 31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정취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다고 한다. “국가에 의한 해고”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하는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3차 공동파업

병원 측의 자회사 방안 방관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장호중

3개 산별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 번째 공동파업에 나선다. 3개 산별연맹 대표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월 18일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유은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국립대병원이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민영화 끝수라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립대병원 사용자는 약속했던 직접고용을 실현하는 데 합력해야.”(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정부 치명대 무시하는 국립대병원에 대해서 유은혜 장관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회부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지금 수많은 곳에서 노동자들이 자회사에 반대해 투쟁하고 있다. 자회사는 무늬만 정규직, 이름만 바꾼 용역회사이다. 교육부가 관리 감독하고 감제해야 한다.”(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싸우자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측에 공문을 보내고 사측을 만나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직접고용을 분명히 하지 않는 정규직 전환 지침은 국립대병원 사측이 계속 자회사 방안을 만지작거리게 했을 뿐이다.

7월 말에는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사측과 노동조합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모아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노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제대로 참관하지도 않았다. 국립대병원 사측은 “생명·안전과 직결된 일부 업무만 직접고용할 수 있다”며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자회사 전환도 열어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이 지적하듯이 병원 업무 중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업무는 없다. 자회사를 부분 허용하면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는 여전히 병원에 남게 된다. 결국 이 협의는 아무 성과도 없이 두 차례 회의 끝에 중단됐다.

3개 산별연맹 노동자들은 8월 22일 3차 파업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기한 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매우 절실하다. 정규직 노동조합은 이 투쟁 초기부터 비정규직을 적극 지원·연호하고 있다. 기층 조합원들로부터 연대가 확대된다면 사측에 훨씬 강한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할 필요도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요구를 내걸고 파업에 나선다면 효과도 배가될 것이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다섯 달 가까이 싸워 온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교육부 앞 기자회견 ‘자회사는 또다른 파견용역직’

사진:톨게이트 노동자연대노조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미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처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간제·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이 없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면 사회가 갱생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자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혁명의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 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연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일한다.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신정환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4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8월 19일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특조위 발표 내용을 보면,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발전소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몰고 근무조건(고용과 임금 등)을 악화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 위기를 이유로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했다. 그 일환으로 발전 업무를 안전에서 떼어낸 뒤 민간에 판매하기 좋게 화력발전소를 회사 5개로 분할했다.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화력발전사 민간 매각은 좌절됐지만 말이다.

여대 정부들은 발전소의 김용균 씨가

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경상정비의 외주화를 확대했다. 분할된 화력발전사들은 경쟁체제 속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무무를 최저가 계약에 낙찰했다. 안전 책임도 떠넘겼다.

최저가로 입찰한 민간 하청업체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최소 인원만 저임금으로 고용했다. 이번 특조위 조사에서 하청업체들이 발전사로부터 받은 노동무비 중 50퍼센트만을 인건비로 지불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민영화와 경쟁체제는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위험업무를 증가시켰다. 화력발전사들은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저질 석탄을 도입했다. 효율이 낮아 전기를 만드는 데 더 많은 석탄을 실어야 했고, 이송 과정에서 더 많은 낙탄이 쏟아져 컨베이어 벨트의 고장이 잦았다.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벨트 기동 중에 더 낙탄을 처리하고 위험하게 몸을 밀어 넣고 사진을 찍어 보고해야 했다. 김

용균 씨는 입사한 지 3개월도 안 돼, 홀로 근무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그래서 특조위는 김용균 씨가 “작업지시(될)다 지켜서 죽었다”고 했다. 개인 과실이 아닌 민영화와 경쟁 체제가 낳은 위험한 구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권영국 특조위 간사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 정책에서부터 발전사의 경쟁 방침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사실은 한 세트를 이루어 김용균 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저희는 추측했습니다.”

또한 특조위가 공개한 발전소 현장은 화하고 위험업무를 증가시켰다. 화력발전사들은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저질 석탄을 도입했다. 효율이 낮아 전기를 만드는 데 더 많은 석탄을 실어야 했고, 이송 과정에서 더 많은 낙탄이 쏟아져 컨베이어 벨트의 고장이 잦았다.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벨트 기동 중에 더 낙탄을 처리하고 위험하게 몸을 밀어 넣고 사진을 찍어 보고해야 했다. 김

발암 물질이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발전사는 그러지 않았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 규정의 하한형을 정하지 아니하여 엄정한 처벌을 통한 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특조위 보고서)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개정 산안법에 크게 불만을 나타내며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발전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주화가 본격화한 지난 10년간 재해가 428건 일어났는데, 95퍼센트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 외주화 확대가 재해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윤을 사람과 안전보다 우선한 결과다.

특조위 보고서에 적시된 발전소의 실상은 김용균 씨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살인 병기”와 다르지 않았다. 김용균 씨 어머니는 특조위의 결과 발표를 보며 여러 번 눈물을 쏟아 냈다.

특조위는 정부의 안전 관리·감독과 법적 제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용균 법’이라고 잘못 불린 개정 산안법에서도 발전소와 같은 위험 업무들은 도급 금지와 도급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외주화로 인한 위험을 노동자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 규정의 하한형을 정하지 아니하여 엄정한 처벌을 통한 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특조위 보고서)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개정 산안법에 크게 불만을 나타내며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살인 병기

특조위는 권고안 22개를 제시했다. 민영화·외주화 철폐,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는 발전사가 직접고용 정규직화하고 경상정비 업무는 정비 전문 공공기관인 한전KPS가 직접고용 정규직화, 안전을 위한 필요 인력 충원, 산업

법 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체로 노동자들과 노동운동이 요구해 온 것들로 지지할 만하다. 운전과 정

비 모두에서 특조위가 권고한 정규직 전환안은 이전 정부 방안보다 진전된 내용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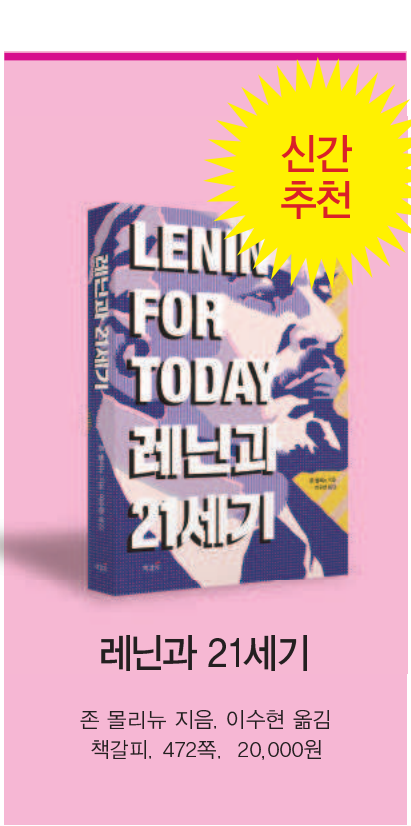
공공운수노조와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게 “정부와 여당이 설치한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특조위가 경상정비 업무도 발전사가 통합·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면서 “단계적 대안”(한전KPS 직접고용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운전과 정비 업무 모두를 발전사가 직접고용하는 것은 당장은 무리라고 본 것이다. 일부 노동자들도 이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는 듯하다. 운전이든 정비든 하나의 민간 업체에 소속돼 있는데다 발전사 직접고용 목표를 내걸고 함께 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특조위 결과 발표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날은 국무총리는 “정부는 안전보건법령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체로 노동자들과 노동운동이 요구해 온 것들로 지지할 만하다. 운전과 정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월 20일 기자회견에서 특조위 권고안 이행을 요구하며 8월 31일 서울 상경 집회 등 투쟁 재개를 선포했다. 특조위 결과 발표를 계기로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진하기를 바란다.



대우조선 매각-현대중공업 인수

반일 민족주의 내세워 구조조정 압박 말라

박설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주요 산업 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구조조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대내외 경기 악화에 대응해 과감한 “규제 혁파” 등과 함께 “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재천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는 이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5조 원 조성에 우선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우조선 매각 방침도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 이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한다.

정부는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해 기업의 덩치를 키우면 세계시장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세계경제 상황과 조선업 경기가 불안정할 때는 인수합병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오히려 동반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46퍼센트나 하락했다.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에서는 인수합병이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조건 후퇴 등의 고통만 낳을 뿐이다.

대우조선 매각은 정부 소유 기업에 사기업에 팔아넘겨 정부의 일자리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대우조선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의 협력업체 노동자와 가족 수십만 명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 인수합병으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조건도 위협을 받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우조선 매각 방침을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며 노동자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했지만 그것이 말뿐인 사기였음이 드러난 지 오래다. 최근에는 광주형 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의 지역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노동운동은 대우조선 민영화 때문에 제조업 일자리가 날아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공론화하고, 정부가 일자리 책임을 지라고 요구해야 한다.



사진 출처: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민족주의 압박에 맞서 일자리와 조건을 방어해야

한일 갈등이 지속되면서 일본이 현대중공업-대우조선의 기업결합(합병)을 불승인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실제로 일본이 불승인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걸면 다른 해외당국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현대중공업 측이 일본에 대한 기업결합 신청을 다소 늦출 수 있다.

그러나 설사 해외 심사가 약간 지연

되더라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노동자에게는 청신호가 아니다. 정부는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인준이 완료되는 대로 국내에서 먼저 승인 발표를 하는 등 다른 절차를 착착 추진할 것이다. 국가 간, 기업 간 경쟁과 이권에 좌우되는 해외당국 심사 일정을 지나치게 의식하기보다, 정부와 사측을 압박하는 하반기 투쟁 일정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빌미로 대우조선 매각-인수합병을 정당화하려 한다. ‘국가 경쟁력, 한국 조선업 경쟁력을 위한 국민적 단결!’ 같은 애국주의 연사를 동원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사측도 “경제 전쟁 와중에 왜 파업” 이냐며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하고, 이번 임단협에서도 노동자들이 양보하고 구조조정을 감내하라고 한다.

이에 단호히 맞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조건을 방어해야 한다. 노동운동은 정부와 사용자들이 애국주의 열풍을 이용해 벌이는 구조조정 압박을 폭로하고 규탄해야 한다.

6월 13일 실사저지·매각저지 투쟁 승리를 위한 대우조선 노동자 결의대회. 기업주들의 이윤 추구를 도우려고 지원하는 수조 원의 재정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공동 투쟁

5월 말~6월 초 일사천리로 법인 분할 절차를 마친 현대중공업 사측은 국내의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위해 애쓰는 한편, 노동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에 나섰다. 1400명이 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징계, 30억 원 가압류, 100여 명에 대한 검·경의 수사 등.

이번 탄압은 지난 주주총회 저지 투쟁에 대한 보복이자, 구조조정 강행의

지의 표현이다. 특히 대우조선 인수 성사에 사활을 거는 사측은 노동자들의 반발을 탄압으로 위축시키려 한다.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모두에서 구조조정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해외 기업결합 심사 통과를 위해 설비·인력 축소를 조건부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인수합병을 통해

노동자들을 성과 경쟁으로 내몰고 임금·조건 하락을 압박하려 할 것이다.

대우조선 인수와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은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대우조선 매각-인수합병 저지 공동 투쟁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주주총회 결정(법인 분할)을 무력화·사문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일자리 보호를 위한 상시 국유화

정부는 부도·매각 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의무와 능력이 있다. 대우조선은 이미 국가 소유 기업이고, 정부는 지금껏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출해 왔다. 이런 돈은 기업주가 아니라 수십만

개 일자리를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한다.

대우조선 매각을 저지하고 상시 국유화하는 것이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노동자 모두를 위한 대안이다. 이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쥐어짜 시장에 내다팔기 좋게 만드는 데(민영화) 목표를

두는 현재 대우조선의 임시 국유체제와 다른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상시 국유화를 할 리 만무하다. 이래로부터 거대한 저항이 없다면 말이다.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과 연대 건설이 중요한 이유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교회 | ☐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_____)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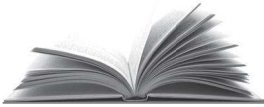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 트위터 @wspaper



온라인 구독 방법 한 눈에 보기 wspaper.org/online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서평 |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폴 풋, 헬 드레이퍼 지음)

초심자도 이해하는 사회주의의 핵심 의미

김재현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정치인 버니 샌더스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인기가 지금도 식지 않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샌더스의 인기가 높다. 이런 흐름은 매우 반갑다. 옛 소련과 동구권의 스탈린주의 체제 붕괴 뒤 너도나도 사회주의라는 단어조차 내다 버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사회주의가 대중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지속되는 자본주의 위기와 사회 양극화 심화 속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찾는 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새 세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책이 나왔다.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책갈피)가 그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영국의 인기 있는 탐사보도 기자였던 폴 풋(1937~2004)이다. 그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 영국의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오랜 당원이기도 했다.

저자는 “사회주의를 소련과 동유럽에서 이뤄진 끔찍한 왜곡에서 구해내고 ... 오늘날(1990년) 좌파를 마비시키는 패배주의적 냉소를 극복할 진정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이 책을 썼다.

소련과 동유럽 스탈린주의 체제에 의해 사회주의가 왜곡된 영향은 그 체제가 몰락한 지 30년이 됐는데도 남아 있다. 우리 나라 좌파들 중 기관지나 강령에 사회주의를 표방한 조직들도 어떤 사회주의인지는 대개 모호하다. 당연히 “어떻게?”라는 질문에 구제적이지 않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주의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1956년 헝가리 혁명부터 1980년 폴란드 연대노조 투쟁까지, 스탈린주의 체제 하 동유럽에서도 인류에게 희망을 보여 준 노동자 혁명들이 일어났지만, 좌파들은 길을 잃고 부르주아 국가를 재건하는 잘못된 길을 택하기 일쑤였다. 폴 풋의 책은 최상의 길잡이다. 그는 쉬운 언어로 진정한 사회주의의 의미를 찾는 여정으로 우리를 이끈다.

노동계급의 자력해방

인류가 계급으로 나뉜 후부터 해방운동은 계속 존재해 왔다. 신·메시아·영웅 등 소수 엘리트가 불쌍한 민중에게 해방을 선사할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전통도 있었다. 마르크스는 최초로 이를 체계적인 이론·사상과 결합시켰다. 자본주의에서 처음으로 사회 전체를 해방할 수 있는 규모의 부가 창출됐는데, 바로 그 부를 생산하는 노동계급의 자력해방만이 인류를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고 봤다.

선한 지배자들의 자비에 의지한 당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폴 풋, 헬 드레이퍼 지음, 차승일 엮음, 책갈피, 232쪽, 12,000원

대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과 달리,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의 해방은 반드시 노동계급이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1864년 국제노동자협회[제1인터내셔널] 규약 첫 구절)고 강조했다. 노동계급이 “자신을 변화시켜 정치적 지배를 감당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력해방이 꼭 필요하다.

폴 풋은 노동계급의 자력해방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지적한다. 이 책 부록에 실린 ‘사회주의의 두 가지 정신’의 저자인 미국의 사회주의자 헬 드레이퍼는 “《자본론》의 전체 내용이 이것에 비하면 부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노동계급의 자력해방은 인류해방을 향한 투쟁의 역사에서 중요하고 새로운 사상이다.

노동계급 자력해방의 실천적인 의미는 1871년 첫 모습을 드러냈다. 1871년 파리 노동자들이 72일간 권력을 장악하고 어떤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민주적으로 파리를 운영한 것이다. 선출된 공직자는 선출한 사람들에게 책임져야 했다. 대표자는 어떤 특권도 없이 노동자의 평균 임금만 받았고, 선출된 사람들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즉시 소환될 수 있었다. 마르크스는 이 파리 코뮌의 경험을 보고 자본주의 국가와 완전히 다른, 노동자 국가의 운영 원리를 이끌어 냈다.

혁명과 반혁명

마르크스를 계승한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1917년 러시아 노동자들의 권력 장악을 이끌었다. 최초로 부르주아 국가를 분쇄하고 노동자 권력 장악에 성공한 것이다. 소비에트[노동자평의회]가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등장했다. 파리코뮌처럼 “소비에트의 대표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했고 어느 때고 ‘소환’될 수 있었다. 소비에트 대표자들의 보수는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의 임금과 똑같았다.”

노동자들이 꿈도 꿀 수 없는 높은 보수와 임기 보장 등 특권을 누리며 자신을 선출한 이들을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하의 정



1917년 러시아 노동자들은 착취와 차별에서 해방된 세계의 모습을 잠깐 보며 췌다

치인들과 비교해 보라. 소비에트는 더 나아가 파리 코뮌이 이루지 못한 노동자 권력의 전국적이고 민주적인 네트워크를 건설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러나 폴 풋은 러시아에서 수립된 노동자 국가가 어떻게 고립돼 질식당해 갔는지도 설명한다. 유럽에서 가장 후진적인 사회 중 하나였던 러시아에서 권력을 장악한 노동계급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러시아 혁명의 확산에 두려움을 느낀 여러 자본주의 국가들이 직접 군대를 보내며 러시아의 구 지배자들의 반혁명을 지원해 러시아 혁명의 목을 조른 것이다.

내전으로 나라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새롭게 해방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회를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의 사회로 여겨 완강하게 방어했다. 문자 그대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바칠 각오였다.” 유럽에 혁명의 물결이 일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특히, 독일 혁명이 패배하면서 러시아 혁명은 고립됐다.

이 속에서 부상한 당·국가 관료층의 우두머리 스탈린은 혁명의 국제적 확산이라는 어려운 길을 버리고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각축하는 지배계급으로 살아남기로 했다. 1928년부터 노동자들의 필요를 위한 생산을 포기하고 축적을 위한 생산으로 방향을 틀었다. 레닌을 미라로 만들고 신격화해 레닌의 이름으로 당내 반대파를 모두 제거했다.

“아래로부터 사회주의를 입 밖에 내는 사람은 누구든, 작업장에서 매우 소소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더라도,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처형당했다.” 러시아 혁명의 흔적은 국가 소유라는 빈 껍데기만 남기고 모두 말살됐다. 스탈린은 민간 기업이 존재하는 서방 자본주의와는 형태만 다른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반혁명을 수행한 것이다.

스탈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제2차세

계대전 후에는 동유럽에서 소련과 똑같은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이식했다. 그 과정에서 나치 점령 시절의 탄압 기구를 인수해 노동자 조직들을 모두 파괴했다. 노동계급의 자력해방과는 정반대의 일을 벌인 것이다. 이제 한동안 아래로부터의 노동계급의 자력해방 사상은 스탈린주의에 의해 질식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서기장의 보복보다 역사의 보복이 더 무섭다”고 한 러시아 혁명 지도자 트로츠키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연이은 노동계급의 반란들은 자력해방을 향한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웅변했다.

폴 풋은 스탈린주의 체제 하의 동유럽 노동자들이 벌인 위대한 저항의 역사도 소개한다.

1956년 헝가리 혁명에서 노동자들이 창조한 자치기관은 러시아 혁명 당시 급속히 생겨난 “노동자, 농민, 병사 평의회와의 두드러진 유사성 등 모든 면에서, 놀라운 통일성을 보여줬다. ... 무장한 민중이 신뢰하는 대중의 자치기관이었다.”

1980년 폴란드 노동자들이 건설한 연대노조는 폴란드 노동자의 80퍼센트인 1000만 명을 조직해 노동계급의 힘을 과시하며 스탈린주의 지배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스탈린주의 체제 지배자들은 이런 노동자 반란들을 어찌어찌 진압했지만, 마침내 1989년 갑작스럽고 매우 강력한 “대중행동의 폭풍이 일었다.” 1991년 소련의 몰락으로 진정한 사회주의의 목을 조르던 스탈린주의 체제는 붕괴했다.

그러나 ‘사회주의’라 불렸던 이 체제를 지키려 한 노동계급의 행동은 없었다.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로 불렸던 체제가 사회주의가 아님을 보여주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다.

일당 독재와 3대 권력 세습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도 노동계급의 자력해

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체제는 해방 뒤 소련의 군대가 세운 것으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과 무관했다.

사회민주주의

독일 사회민주당의 지도적 인물이었던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은 1898년 “투표권과 노동조합 덕분에 사회주의의 전망이 바뀌었다”며 개혁주의 노선을 천명했다. 독일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로자 룩셈부르크의 말대로, “같은 목표를 이루는 더 평온하고 안정적인 고 느린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목표를 선택한 것이다.”

베른슈타인의 후예들은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며 더 우경화했다. 폴 풋은 노동당이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결과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빈곤층의 어마어마한 증가, 민영화, 부자 감세, 복지 삭감, 노동자 임금에 대한 공격 등등.

근래 주류 사회민주주의의 위기를 배경으로 부상한 그리스의 시리자와 같은 좌파 개혁주의도 병혹한 시험대에 올랐지만 실패했다.

“산업, 금융, 법, 군대가 전혀 선출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소수의 수중에 남아 있다면” 투표로 기존 국가기구를 장악해 체제의 병증을 치료해 보겠다는 사회민주주의 프로젝트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

유일하게 러시아 노동계급이 자력으로 쟁취한 노동자 국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진전된 민주주의와 해방의 전망을 짧게나마 보여 줬다. 피억압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경제 위기, 전쟁으로 이어질 제국주의의 격화,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 자본주의를 끝장내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자력해방, 진정한 사회주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진정한 사회주의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